우암학원 창학 70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기업이 원하던 자리 지식산업센터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분양중 062)372-6666 시공 삼일건설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382호 1판 (음력 9월 27일)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광주시민 80% "군공항 이전 없는 민간공항 이전 반대"

광주시민권익위, 시민 2500명 설문조사

"군공항 합의 후 민간공항 옮겨야"

이용섭 광주시장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장 직속 시민권익위원회가 11일 이 시장에게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기 재검토'를 권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80% 육박하는 광주 시민이 군 공항 이전이나 합의 없이 민간공항 단독 이전을 반대한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5면〉

이 시장은 난감한 모습이다. 모처럼 찾아온 시·도 상생 분위기를 이어갈 것인지, 시민여론을 그대로 수렴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일단 최근 전남도와 시·도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모처럼 상생 분위기를 조성한 상황에서, 2018년 전남도와의 (민간공항 무안 이전)약속을 깨고 시민권익위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시민의 이전 반대 의견이 워낙 크고, 이번 여론조사를 진두지휘한 최영태 시민 권익위원장이 "단독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의견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이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점은 부담이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우려도 크다.

그렇다고 아예 출구 전략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신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광주시가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지키는 대신 전남도도 광주 군 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진정성 있는 시·도 상생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 시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완료하고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광주시에 민간공항 이전 시기 재검토 등을 정책권고했다.

광주시민 2500명이 참여한 공항이전 관련 시민 설문조사에선 민간 공항의 적절한 이전 시기에 대해 30.1%가 '군 공항과 동시 이전', 49.4%는 '군 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전남도와의 합의가 이뤄질 때'라는 결과가 나왔다. 시민 79.5%가 민간 공항 이전을 군 공항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협약대로 내년까지 민간 공항을 무안 공항으로 이전·통합해야 한다는 응답은 11.7%에 그쳤다.

군 공항과 민간 공항 이전에 대한 질문에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 모두 이전'(35.2%), '군 공항은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존치'(43.7%), '군 공항과 민간 공항 모두 존치'(12.2%) 등 민간공항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절반이 넘었다.

시민권익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는 전남도와 군 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은 후 민간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전남도, 국방부, 국토교통부와 소통과 협력 등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전 사업을 추진하라"고 정책 권고했다. 광주시는 시민권익위 운영 조례에 따라 1개월 안에 실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14차례 정책 권고는 시에서 모두 이행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2018년 8월 광주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통합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전남에서 군공항 이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광주시민의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가장 먼저 광주시가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전남도에서도 광주시민이 민간공항 이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물이 잘못되면 시·도 행정통합을 계기로 모처럼 조성된 상생 분위기가 어긋날 수 있지만, 지혜롭게 잘 풀어낸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시·도 상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시민권익위원회가 민간공항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11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코로나 5일간 26명 확진 '비상'

광주 유흥업소 종사자 2명·화순 목욕돌봄 요양보호사 확진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7면〉

11일 하루 동안 광양에서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화순에서는 집집을 돌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 10명을 목욕서비스하는 50대 여성 요양보호사가 확진되면서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10일 밤부터 이날까지 유흥업소 종사자 2명을 포함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전날 밤 해외입국자 2명 등 총 4명이 추가로 확진돼 525~528번 환자로 분류됐다. 525번 확진자는 서구 풍암동 거주자로 부산 598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에는 유흥업소 종사자인 528번의 동료(529번)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전 광양에 거주하는 제철소 협력사 직원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후에는 함께 사는 모친과 여동생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화순에서는 이동식 목욕차를 타고 다니며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목욕 서비스하는 50대 여성 요양보호사가 이날 확진됐다. 이로써 전남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03명이다. 이 요양보호사에게 목욕 서비스를 받는 이는 10명가량이다.

지난 주말인 7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각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 유입 사례 6명을 제외한 20명은 지역 감염이다. 신한은행 순천 연향지점발(發) 확진자 7명, 광주교도소 직원 관련 확진자 4명에 광주 유흥업소 종사자 2명이 포함된다. 재확산이라고 일컬을 규모는 아니지만, 최초 감염경로 특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순천 신한은행발 확진자 7명은 최초 확진된 광주 517번과 직원 3명, 직원 가족 2명, 고객 1명 사이의 감염 경로는 재빨리 조사됐지만, 지난 7일부터 5일간 역학 조사를 진행하는 당국은 이들이 어떤 경로로 코로나 19에 감염됐는지 여태 파악하지 못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에서 첫아이 낳으면 580만원 준다

내년부터 출산·육아수당 대폭 확대

광주시가 내년부터 출산·육아 수당을 대폭 확대하는 예산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의회 예산 심의가 주목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출산 축하금 104억원, 육아수당 384억원 등 모두 488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광주시는 3개월 이상 광주에서 거주한 가구에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이상에 2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주기로 했다. 2년간 매월 20만원, 총 480만원의 육아 수당도 지급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을 제외하고도, 광주에서 내년부터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의 경우 출산 축하금 100만원, 2년간 육아 수당 480만원을 합쳐 모두 58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기존에 광주시가 지급한 금액은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60만원 등 출산 축하금이 전부였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신규 시책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는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전환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족한 재원 배분 측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 예산이 전액 통과될지 관심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내 인생 바꾼 5·18…광주가 이재명 정치의 동력"

2022 대선 잠룡에 듣는다

〈2〉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호남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헌신했는데 가장 홀대받고 차별받았다"며 "호남 차별의 시정을 위해 호남 인재 중용, 정책·재정적 배려 등을 과감하게 펼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뷰 3면〉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광주일보와 단독인터뷰를 갖고 "80년 5월 광주는 내 삶을 바꾸었고 이재명 정치의 핵심 동력"이라면서 "저의 정치 구호인 '대동세상'은 5·18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대·국민적 요구에 대해 "공정성 회복"이라고 정의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통합 문제와 관련, "공정을 담보할 수 있는 룰(원칙과 질서)이 지켜져 반칙이 통하지 않는, 예측 가능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는 "저성장과 양극화로 경제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진단한 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 도입 등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 성장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재정 정책 방향을 공급보다 수요에 방점을 두고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는 한편, 수출 기업 등에 대해선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을 넘어선 탄소세 도입, 기초과학 투자 확대 등 수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이 지사는 "주거의 투기 수단화를 막지 못한다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며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장기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외국인·법인의 주택 거래 허가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주지 못해 투기 심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며 "고위 당정 인사에 대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 등을 도입, 초반부터 강력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분배가 아닌 경제 성장 정책이며, 성과는 이미 재난지원금에서 증명된 바 있다"며 "현재로선 매년 1인 50만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현재 약 1920조 원인 GDP가 3000조 원이 되는 시점에서 매월 1인 5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